

##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이 인 숙

(부산장신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출산력, 저출산 요인, 인구복지정책, 사회복지적 함의

### 1. 서 론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는 모든 사회가 기본적으로 출산에 의해 사회성원을 보충하므로 출산은 사회 존속의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출산력은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이홍탁, 1994), 일차적으로 가임력에 의해 그 한계가 결정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작용으로 가임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밖에도 출산력은 혼인, 자녀, 가족 가치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며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인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산업화의 진행과 새로운 의약 발달과 보건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해 사망력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낳았다. 그 결과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다시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억제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 수준의 과도한 감소로 인해 다시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바로 출산 그 자체는 전통적 사회나 근대적 사회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충원에 필수적인 요구이지만, 그러한 요구의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권태환·김두섭 2002).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출산력 변동을 수반하였다. 즉 그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둬오므로 1인당 합계출산율<sup>1)</sup>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0년에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sup>2)</sup>인 2.1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서 1996년 합계출산율이 1.71명으로 감소하여 정부의 인구정책이 인구증가억제책에서 인구자질향상에 주안점을 둔 출산장려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04a).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47명에 도달하였고, 2004년에는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통계청, 2004).

저출산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우려는 무엇보다 저출산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신규 노동력 공급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의 급증과 사회보장비의 증대, 그밖에 차별출산력의 지속에 따른 인구의 질적 저하, 성별 불균형의 심화와 지속 등에 있다(김태현, 1993; 박수연, 1996; 이삼식·조남훈, 2000; 김승권·최병호, 2002). 특히, 고령화의 가속화는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켜 국민부담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소득의 총량을 감소시켜 보험료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인인구의 급증은 연금지출이나 노인의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보험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김승권·최병호,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3)’를 구성하여 인구대책을 총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종 정책 개발과 자원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 등을 위한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는 저출산의 요인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어서 미시적 단기적 정책으로는 저출산의 경향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 1)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단산기에 이를 때까지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성 1명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평생(가임기간)동안 낳을 자녀수가 합계출산율인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출산과 관련된 다른 지표에 비해 그 의미파악이 쉬우면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순수하게 출산수준의 변동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2) 인구대체수준은 이론적으로 인구규모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모두가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부부 2명을 대체할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실제 그 자녀들이 성인 즉, 재생산기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2.1명을 출산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합계출산율이 2.1명일 경우 이를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의 출산율이라 부른다. 저출산이라 함은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요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제반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출산관련 인구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화하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출산력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출산의 양적 증가를 기대하는 양적 인구 조절정책을 넘어서 삶의 질의 향상에 기반한 새로운 인구복지정책을 위한 연구의 시도인 것이다(김수연,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력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검토하고,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자녀수의 결정요인과 향후 출산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저출산의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출산력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경향

출산력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개인의 출산력에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울러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써 과거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우리 사회 출산율 저하를 이끌어 왔다(박선숙, 2005).

이처럼 출산력 연구에 대한 경향도 우리사회의 제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소득수준 및 여성의 결혼연령 등이 출산력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화영(1980)의 연구에 의하면 출산력의 저하 요인<sup>3)</sup>에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부에서 추진해 온 가족계획사업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변수의 출산력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하였는데, 연구 결과 1970년대의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혼인율, 가족계획사업이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저출산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1962년에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한 하락을 지속하면서 피임 및 출산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김승권·김민자, 2003),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수의 내부구조에

3) 이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인구학적 변수는 결혼율, 사망률, 재생산 인구비, 인구밀도 등이며, 사회경제적 변수는 농가비, 여성교육수준, 재학생비율, TV소유율, 핵가족 비율 등이며, 가족계획사업관련변수는 의사와 약사비율, 누적가족계획 요원수, 누적 피임수용률, 불임수용률 등이다. 종속변수는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였다.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장창곡·김응석, 1988). 즉 개인적 특성이 출산력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들 변수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출산력에 관한 분석을 할 때는 변수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였다(Freedman, 1975). 연구결과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교육수준은 시·군에서 모두 출산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교육수준과 결혼연령, 소득수준이 모두 높을수록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70년대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저출산이 일반화되면서 정책적 효과를 넘어서 일반적 행태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의 출산을 저하와 관련하여 김한곤(1993)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거시적 분석의 변수로는 사회경제적 발전지수, 여성의 지위, 가족계획사업지수(불임시술율) 등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발전은 합계출산율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고, 경제활동참여율을 포함한 여성의 지위도 출산율에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불임시술도 출산과 부적관계를 가지지만 그 영향력은 적은편이어서 사회경제적 발전은 여성의 지위와 불임시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김한곤, 1993: 81-93). 한편, 미시적 분석의 변수는 학업정도, 결혼 전 노동력 참여여부, 초혼연령, 결혼 후 현재의 고용상태, 남편 직업의 유형, 피임실천여부, 이상적인 자녀수 등이 포함되었는데, 초혼연령과 여성의 교육수준, 효과적인 피임의 사용은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혼여성들의 고용상태의 경우는 실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곤, 1993: 102-107).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연구는 출산력의 전환과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조남훈·김승권, 1997; 김승권·조애저, 2000; 김승권·최병균; 김승권·김민자, 2003). 이 시기의 저출산과 관련된 주요연구들은 출산행태, 피임수용실태, 인공임신중절실태, 모자보건실태 등과 이와 함께 결혼양상, 가족주기,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생활과 가족복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저출산 대응정책을 강구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함께 수반된 개인의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승권·조애저, 2000; 김승권·최병균, 2002; 김승권·김민자 2003).

## 2)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up>4)</sup>

출산력의 차이는 대상 부부의 연령, 교육정도, 종교, 사회계층과 같은 인구학적 및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결정된다(Kramer, 1987).<sup>5)</sup> 그러므로 단일요인으로 출산율의 격차를 설명

4) 저출산을 설명하기위해 많은 이론적 틀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출산과 관련된 합리적 선택, 위험, 성평등, 관계성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저출산이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맥락하에서 설명되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이 발생하는 광범위한 맥락에 따라 이론적 틀이 달라져야 하므로 저출산에 관한 거대이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논의 되고 있다(McDonald, 2001).

5)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또는 가치관적 요인을 고찰하여 출산력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차별출산력 개념이다. 이는 어떤 배경변수에 의해 출산력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출산력 저하를 가져오는 기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작용한다(권태환·김두섭, 2002; Balakrishman, Ebanks, and Grindstaff, 1980).<sup>6)</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에서의 저출산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연령의 상승과 이로 인한 출산의 연기, 그리고 유배우자의 출산력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Toulemon, 2001), 또한 저출산을 출산 연령 패턴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코호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Frejka and Calot, 2001). 즉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고연령에서의 출산율 증가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여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하면서, 저출산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출산의 연기이지만 미래의 계획된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한편, 출산의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로 출산 연령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출산 경험의 진행 기간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Kohler, 2001). 이는 출산 기간의 연기가 장기적으로 출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 것을 간과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미래에 무자녀의 상승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출산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인 둘째 아이 출산을 하지 않게 되어 출산력의 실제적인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결혼연령의 연장<sup>7)</sup>과 유배우자 출산력의 저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최근의 출산수준이 유배우자 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연장 또는 독신생활에 기인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김한곤, 1993; 김승권·김민자, 2003).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출산력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취업여부 혹은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된다(변준한, 2003).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출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출산력 저하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난다(Davis, 1982; 김혜순, 1982; 김한곤, 1993; 김승권·서문희, 2001). 소득수준의 향상은 출산력을 일정 정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가 없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결과와 소득 수준은 출산력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Ewer and Crimmins-Gardner, 1978).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개별 부모의 경제적 동기가 경제발전 내지 근대화의 전개와 맞물려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경제적 비용인식을 증대시켜 소자녀 가족을 형성케 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신영수, 2003).

직업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력은 높지만(조혜정, 1988), 여성의 역할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의 차이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이 잘 보여준다. 즉 여성의 취업조건이 출산휴가, 근무시간의 유연성, 질 높은 보육

가를 고찰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출산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6) 이는 저출산을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인구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폭넓은 설명을 통한 광범위한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Wilson, 2001).
- 7) 결혼연장의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은 고학력자일수록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결혼 연장의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결혼 후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에 남녀평등의식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며, 남녀의 교육수준이 평등화 경향을 보이면서 최고학력 여성과 최저학력 남성의 결혼율이 낮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Choe, 1998).

시설의 보장 등으로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이 취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률이 함께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취업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출산율과 취업률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Brewstin and Rindfuss, 2000; Gauthier, 1996).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조건, 보육시설 환경 등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원만하게 해 나가기에 부적절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김한곤(1993)의 연구에서는 1966-1985년 기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력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그 자체보다는 사회경제발전에 수반된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지위의 향상이 출산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출산력 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그리고 남아선호 등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다(이삼식·조남훈, 2000; 김승권·최병균, 2002, 2003; 이병렬, 2003). 최근 결혼이나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1990년대 초반 결혼의 필요성은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1991: 75.5%, 1996년: 68.0%, 2000: 55.6%, 김승권·김민자, 2003).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출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은 결과를 보인다(조남훈·김승권, 1997; 김승권·조애저, 2000; 김승권·서문희, 2001). 이밖에도 남아선호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데(Chain, 1993; Nugent, 1998; 김태현,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아선호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는 남아선호가 출산력 저하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고(Coombs, 1979; Yount, Langgsten, and Hill, 2000), 일부는 자녀의 성구성의 차이가 출산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Repetto, 1972; Park and Cho, 1993; 서문희, 2003).

사회정책적 측면과 관련한 출산율 저하를 살펴보면 출산력 저하는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조남훈·김승권, 1997; 김승권·최병균, 2002; 전광희·김두섭·박상태·은기수, 2002). 즉 정부주도의 인구증가 억제와 관련된 가족계획정책, 모자보건 등에서 실효를 거두면서 출산력 저하를 선도하였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있어 서구 선진국과 다른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 높은 사교육비, 이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희망 자녀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정영숙, 1997; Kim and Kim, 2004). 이는 자녀가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자녀수를 제한하여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해 양육과 교육비용을 집중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상대적으로 줄이려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이삼식·조남훈, 2000).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저출산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의 미혼과 기혼 남녀가 되며, 조사 지역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이었다. 조사대상의 주요 연령층은 가임기에 있는 20대와 30대가 주요 출산집단이므로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먼저, 경상남도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근거로 20개 시·군에 표본을 할당하여 각 집단 내에서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 연령별 구성에서는 20대는 미혼과 기혼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30대는 혼인율을 감안하여 미혼과 기혼의 비율을 1 : 4로 할당하였다. 특히 출산에서 있어 여성의 취업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할당 하였다.

조사는 2004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경남의 각 시·군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본 할당 수는 580명이었고, 여유 표본을 포함해 605개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들 표본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혼을 한 기혼자 360명이 주로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현재 자녀가 있거나 향후 자녀 출산 여부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 2) 측정도구

출산 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현재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으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조사항목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과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차별출산력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기간, 자녀유무, 총자녀 수, 첫 자녀 성별, 거주지 등의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고,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월 평균 가족 총 소득과 교육년수, 직업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치관 요인으로는 결혼 및 자녀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남아선호 정도, 부부관계의 불평등성,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을 포함시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아들이 한명은 있어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는 가사일은 주로 아내가 맡는 것이 좋다’,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

은 일이다 등이다. 한편, 이밖에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교육비 등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없어 전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여부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출산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요인과 자녀출산과 관련된 희망 정책 및 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및 오류 검토 작업을 거쳐 SPSS WIN 12.0을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출산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으며,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chi^2$ 검증을 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20대, 30대의 기혼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이 54.3%를 차지하고, 남성이 45.7%였다. 조사 대상자는 77.0%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3.0%는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20-24세는 15%에 그치고, 25-29세가 29.8%이고, 30-34세가 27.7%, 35-39세가 41.0%의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21.6%이고, 대졸이상이 78.4%를 차지해 젊은 연령층인 만큼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은 전문직이 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무직이 24.5%였으며, 이들 중 주부는 19.8%가 포함되었다. 이들의 월 평균 가족 총 소득은 310-400만원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10-300만원으로 24.0%를 차지했고, 510만원 이상도 11.5%를 차지해서 직업적 지위가 높은 만큼 소득 수준도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자들 중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가 54.4%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45.6%였고, 이들 중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3.0%, 자녀가 두 명인 경우는 30.8%이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2.8%에 그쳤다.



&lt;표 1&gt; 조사대상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64	45.7%
	여성	195	54.3%
연령	20-24세	5	1.5%
	25-29세	99	29.8%
	30-34세	92	27.7%
	35-39세	136	41.0%
교육수준	중졸이하	1	.3%
	고졸	76	21.3%
	대졸	252	70.6%
	대학원이상	28	7.8%
직업	전문직	96	26.7%
	사무직	88	24.5%
	기능및생산직	19	5.3%
	서비스판매직	22	6.1%
	농축수산업	7	1.9%
	주부	71	19.8%
	학생	2	.6%
	기타	54	15.1%
자녀 유무	있다	185	54.4%
	없다	155	45.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3	13.5%
	210-300만원	23	24.0%
	310-400만원	36	37.5%
	410-500만원	13	13.5%
	510만원 이상	11	11.5%
지역	시지역	275	77.0%
	군지역	82	23.0%
자녀수	없음	155	43.4%
	1명	82	23.0%
	2명	110	30.8%
	3명이상	10	2.8%

## 2) 현재 자녀수 결정 요인

### (1) 단순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변수들의 단순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총자녀 수의 평균은 1.6명이며, 표준편차는 0.626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31.6세이며, 표준 편차는 4.74세이다. 거주 지역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시지역이 70.3%를 차지하였다. 결혼 기간은 평균 7.7년이며, 첫 자녀의 성별은 남아인 경우가 54.5%이었다. 또한 가족의 월 평균 총소득은 372만원 정도이며, 표준편차는 128만원으로 소득 편차가 큰 편이었다. 이들의 교육 수준은 평균 15.4년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가 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5점 만점에 평균 2.41점으로 3점을 중심으로 볼 때 결혼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중 남아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평균 3.28점으로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 정도는 평균 2.30점으로 가장 찬성도가 높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평균 3.83점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고,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 욕구는 평균 3.67점으로 찬성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이들 가치관 관련 측정변수 중에서 남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편차(1.23)가 가장 컸다.

<표 2> 변수들의 단순기술통계치

항목	단위	N	평균	표준편차
총자녀수	명	101	1.614	.616
연령	세	101	31.574	4.748
지역(시)	더미*	101	70.3(%)	-
결혼기간	년	101	7.743	3.923
첫자녀 남아	더미*	101	54.5(%)	-
소득수준(월)	만원	101	372.327	128.578
교육수준	년	101	15.347	1.676
직업 있음	더미*	101	86.1(%)	-
결혼의 필요성	점수	101	2.406	1.193
아들 필요성	점수	101	3.277	1.226
자녀의 필요성	점수	101	2.297	1.162
부부관계 불평등성	점수	101	3.832	1.132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점수	101	3.663	1.169

\* 더미변수의 경우 지역은 군지역이, 첫 자녀 성별의 경우 여아, 직업의 경우 직업 없음이 기준변수임, 더미변수의 경우 표준편차는 표기하지 않음.

다음은 자녀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독립변수에서 제외될 변수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3>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보여준다. 우선 종속변수로 사용된 총자녀 수는 조사 대상자 연령과 결혼기간, 총소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등과 관련성을 보인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으며( $r=.280, p<.001$ ), 결혼기간이 길수록 자녀수가 많으며( $r=.532, p<.001$ ), 총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았다( $r=.409, p<.001$ ). 자녀수와 가치관과의 관계에서는 자녀수는 결혼의 필요성( $r=.245, p<.01$ )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lt;표 3&gt;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자녀수	연령	시지역	결혼 기간	첫 자녀 남아	소득 수준	교육 년수	직업 있음	결혼 필요 성	아들 필요성	자녀 필요성	부부 관계 불평 등성	자녀 대리 성취 욕구
자녀수	1.000												
연령	.280***	1.000											
시지역	.064	.119	1.000										
결혼 기간	.532***	.222*	.005	1.000									
첫자녀 남아	.110	.099	-.031	.151*	1.000								
소득 수준	.409***	.207	.094	.355***	.114	1.000							
교육 년수	-.095	-.001	.076	-.185*	.100	-.050	1.000						
직업 있음	.070	-.068	.046	.126	.083	-.049	.325***	1.000					
결혼 필요성	.245**	.111	-.190*	.139	.102	.064	-.027	-.129	1.000				
아들 필요성	.152	.159	.056	-.045	-.023	.080	.017	-.077	.178*	1.000			
자녀 필요성	.080	-.003	-.164*	-.046	.020	.011	-.044	-.096	.540*	.301**	1.000		
부부 관계 불평 등성	.067	.183*	-.016	-.075	-.116	.124	-.002	-.005	.180*	.151	.187*	1.000	
자녀 대리 성취 욕구	.001	.097	-.037	-.251**	.003	.193*	.074	.012	.102	.288**	.305**	.305*	1.000

\*p&lt;.05, \*\*p&lt;.01, \*\*\*p&lt;.001

연령은 결혼기간과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한 가치관과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오래되었으며( $r=.222$ ,  $p<.05$ ),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다( $r=.183$ ,  $p<.05$ ). 거주지역 중 시지역 거주자는 가치관 부분에서 관련성을 보이는데, 특히 결혼의 필요성( $r=-.190$ ,  $p<.05$ )과 자녀의 필요성( $r=-.164$ ,  $p<.05$ )에서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즉 시지역이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혼기간은 첫 자녀의 성별이 남아이거나 총소득, 교육 년수,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욕구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총소득이 높게 나타나며, 교육 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치관의 측면에서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여부는 교육년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325$ ,  $p<.001$ ).

가치관 변수인 결혼의 필요성은 아들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 부부관계 불평등성 등과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들의 필요성은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

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도 부부관계의 불평등성과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은 자녀의 대리성취욕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 $r=.305, p<.05$ ).

## (2) 회귀분석 결과

자녀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먼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이들 세 요인을 포괄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 연령, 지역, 결혼기간, 첫 자녀 성별의 네 가지를 입력 방식으로 투입한 결과 <표 4>의 모델 1과 같이 하나의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즉 결혼기간이 현재 자녀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인구학적 요인 중 결혼기간이 자녀수를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결혼기간이 길수록 자녀출산의 가능성이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이 현재 자녀수를 결정하는데 대한 설명력은 21.1%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특히 연령보다는 결혼기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데, 즉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첫 자녀를 출산하게 되므로 출산을 저하가 무자녀의 상승에서가 아니라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게 되는 것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Kohler, 2001).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소득수준, 교육년수, 직업여부의 세 가지를 입력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표 4>의 모델 2와 같이 소득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아 현재 자녀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해 나타나는 자녀수 결정에 대한 설명력은 11.1%이다.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낮추는데 기여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분석의 결과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직업여부가 현재 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업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 여건이나 보육 환경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이 가족과 직장생활의 병립이 지속될 경우 취업과 출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출산과 자녀양육이 취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진 사회에는 출산과 취업을 이 모두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Brewstin and Rindfuss, 2000; Gauthier, 1996; 김한곤, 1993; 장지연, 1997).

&lt;표 4&gt; 현재 자녀수 결정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분석모델 1		분석모델 2		분석모델 3		분석모델 4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인구 학적 특성	연령	.002	.018					.014	.107
	지역	.064	.043					.068	.051
	결혼기간	.070	.445***					.061	.393***
	첫 자녀 성별	-.035	.026					.000	.000
사회 경제 적 특 성	소득수준			.002	.328***			.001	.223*
	교육년수			-.021	-.046			-.014	-.039
	직업 있음			.091	.036			.139	.078
가치 관 적 특성	결혼의 필요성					.011	.013	.089	.171
	아들의 필요성					.037	.048	.056	.112
	자녀의 필요성					-.115	-.150**	-.009	-.018
	부부관계 불평등성					.048	.057	.003	.005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053	-.060	.002	.004
상수		.965		.872		.969		-.038	
R <sup>2</sup>		.211		.111		.024		.401	
		F=15.072***		F=6.578***		F=2.828*		F=4.961***	

\*p&lt;.05, \*\*p&lt;.01, \*\*\*p&lt;.001

세 번째로 가치관적 요인과 관련하여 결혼의 필요성, 남아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부부관계의 불평등성, 자녀 대리성취욕구 등의 다섯 가지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표 4>의 모델 3과 같이 자녀의 필요성과 관련된 가치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정도가 자녀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지만 전체 가치관적 요인은 2.4%의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특히 자녀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현존 자녀수가 많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조남훈·김승권, 1997; 김승권 외, 2000, 2001)로 최근 출산력 저하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가치관의 변화 중에서 특히 자녀의 필요성 정도가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을 모두 포괄한 분석모델은 분석모델 4와 같이 두 가지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즉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통합모델은 자녀수 결정의 전체 변량의 40.1%를 설명하며, 결혼기간이 길수록 자녀수가 많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 3) 향후 출산계획의 결정요인

향후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범주에 따라 모델 1은 인구학적 특성과 모델 2는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모델 3은 가치관 특성, 그리고 모델 4는 이들 세 가지를 통합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단계별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각각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각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전체모형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5>는 향후 출산 계획을 결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모델 1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만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기간, 첫 자녀 성별, 총자녀 수 등이었다(Wald 검정:  $p=0.000$ ,  $p=.029$ ,  $p=.001$ ). 즉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높은 층은 결혼기간이 짧거나, 첫 자녀 성별이 여아이거나, 총자녀 수가 적을 때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층은 첫 자녀가 남아이거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특히 첫 자녀 성별이 다음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남아선호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Chain, 1993; Nugent, 1998; 김태현, 1993), 즉 첫 자녀가 남아인 경우 둘째 아이를 출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첫 자녀가 여자인 경우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남아선호가 출산력 저하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포함한 것으로 향후 출산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Wald 검정:  $p=.007$ ). 즉, 향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출산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의 경우는 젊은 연령층이 많아서 소득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밖에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과 직업 여부는 분석결과 의미 있는 결정요인이 되지 못했다. 이는 교육수준이 초기 출산력 저하의 영향력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교육수준이 평등화 경향을 보이면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도 가정과 직장생활 병립의 필요성이 당연히 되면서 향후 자녀 출산에 결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김민자, 2003). 이는 결국 첫 자녀는 출산하지만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을 줄여 전체적으로 급격한 출산력 저하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모델 3에서는 가치관적 요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만을 포함하여 향후 출산 여부에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결혼의 필요성과 아들의 필요성, 그리고 자녀에 대한 성취욕구 등이 주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Wald 검정:  $p=.004$ ,  $p=.037$ ,  $p=.020$ ). 이는 자녀 출산 가능성이 높은 층은 결혼의 필요성과 아들의 필요성, 자녀에 대한 성취욕구가 높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향후 출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결혼의 필요성이나 남아선호가 덜하고,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욕구가 낮은 경우가 출산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적 요인은 결혼 및 출산, 성선택,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등이 특히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이삼식·조남훈, 2000; 김승

권·최병균, 2002, 2003; 이병렬, 2003), 본 연구에서는 현존 자녀수보다 향후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치관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표 5> 향후 출산계획 결정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석모델 1			분석모델 2			분석모델 3			분석모델 4				
		B	SE	Wald	B	SE	Wald	B	SE	Wald	B	SE	Wald		
인구 학적 특성	연령	-.033	.036	.872							-.110	.065	2.841		
	지역	.004	.383	.000							-.214	.605	.125		
	결혼 기간	-.241***	.050	23.015							-.209*	.102	4.224		
	첫 자녀 성별	-.943**	.290	4.795							-.388	.566	.469		
	총 자녀수	4.046**	1.239	10.586							-1.268*	.565	5.031		
사회 경제 적특 성	총소득				-.004**	.002	7.177				.002	.003	.703		
	교육 년수				.095	.114	.692				.178	.195	.837		
	직업 있음				-.143	.616	.054				-.163	.829	.039		
가치 관적 특성	결혼의 필요성							-.389**	.136	8.178	-.011	.285	.001		
	아들의 필요성							-.227*	.109	4.359	-.425*	.241	3.103		
	자녀의 필요성							.050	.127	.157	-.258	.308	.699		
	부부 관 계 불평 등성							-.181	.116	2.415	.164	.271	.366		
	자녀 대 리성 취 욕구									-.292*	.126	5.391	-.187	.256	.535
상수		4.046*	1.239	10.661	-.500	1.828	.075	.545	.543	1.010	5.196	3.777	1.892		
-2LogL			226.545			98.659			376.036			90.835			
Chi-Square			70.427***(df=5)			32.792***(df=3)			25.159***(df=5)			38.198***(df=13)			

\*p<.05, \*\*p<.01, \*\*\*p<.001

모델 1, 2, 3을 통합하여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을 모두 투입한 결과인 <표 5>의 모델 4(통합모델)는 각각의 모델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1에서 향후 출산 결정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첫 자녀의 성별은 통합모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결혼기간과 총자녀 수는 모델 1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모델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연령이나 거주지역 등은 모델 1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모델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인구학적 특성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과 총자녀 수가 향후 출산 계획에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연

령이나 첫 자녀 성별, 거주지역은 향후 출산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델 2에서 향후 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소득수준은 통합 모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밖에 교육수준과 직업여부는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3에서 향후 출산 결정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 욕구는 통합 모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고, 남아선호만이 모델 3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모델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자녀의 필요성이나 부부관계의 불평등성 등은 모델 3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모델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에 따른 향후 출산여부를 나타내는 통합모델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결혼기간과 총자녀수, 남아선호가 향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아선호에 대한 가치가 강할수록 향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 4) 출산 연기 또는 포기 요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38.7%로 나타났고, 다음이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25.5%로 나타났다. 그밖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가 12.4%이며, '경제적 곤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10.2%로 나타났다. 이를 각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관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데는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거주지역, 자녀수와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과 남성 모두 지금 자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보육비나 교육비의 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은 유사하지만, 경제적 곤란은 남성 응답자가 더 많았고,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해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시지역 거주자는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이었고, 군지역의 경우는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lt;표 6&gt; 개인 특성별 출산 연기 요인

		N(%)					$\chi^2$
		지금 자녀로 충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경제적 곤란	출산후 직장생활 계속할 수 없음	
성별	남성	36(37.1)	8(8.2)	34(35.1)	14(14.4)	5(5.2)	15.147**
	여성	43(36.4)	21(17.8)	27(22.9)	8(6.8)	19(16.1)	
연령	20-24세	3(17.6)	6(35.3)	3(17.6)	3(17.6)	2(11.8)	19.316
	25-29세	19(32.2)	9(15.3)	19(32.2)	9(15.3)	3(5.1)	
	30-34세	25(44.6)	8(14.3)	14(25.0)	5(8.9)	4(7.1)	
	35-39세	26(39.4)	6(9.1)	21(31.8)	3(4.5)	10(15.2)	
결혼 여부	미혼	20(29.0)	12(17.4)	24(34.8)	8(11.6)	5(7.2)	5.340
	기혼	55(39.0)	17(12.1)	36(25.5)	14(9.9)	19(13.5)	
지역	시지역	65(40.1)	24(14.8)	39(24.1)	13(8.0)	21(13.0)	11.495*
	군지역	14(26.9)	5(9.6)	21(40.4)	9(17.3)	3(5.8)	
자녀수	없음	1(5.6)	5(27.8)	8(44.4)	2(11.1)	2(11.1)	22.748*
	1명	6(18.8)	6(18.8)	12(37.5)	5(15.6)	3(9.4)	
	2명	68(45.6)	16(10.7)	37(24.8)	12(8.1)	16(10.7)	
	3명이상	4(30.8)	2(15.4)	3(23.1)	2(15.4)	2(15.4)	
출산 계획	계획 없음	77(41.0)	18(9.6)	50(26.6)	21(11.2)	22(11.7)	13.975**
	계획 있음	1(5.9)	5(29.4)	8(47.1)	1(5.9)	2(11.8)	
소득 수준	200만원이하	3(33.3)	1(11.1)	4(44.4)	1(11.1)		7.478
	210-300만원	8(32.0)	5(20.0)	8(32.0)	2(8.0)	2(8.0)	
	310-400만원	13(33.3)	8(20.5)	13(33.3)	2(5.1)	3(7.7)	
	410-500만원	13(40.6)	6(18.8)	6(18.8)	1(3.1)	6(18.8)	
교육 수준	고졸이하	17(33.3)	9(18.8)	12(25.0)	4(8.3)	7(14.6)	8.571
	대졸	59(38.3)	20(13.0)	43(27.9)	16(10.4)	16(10.4)	
	대학원이상	3(25.0)		6(50.0)	2(16.7)	1(8.3)	
직업	없음	20(64.5)	1(3.2)	4(12.9)	6(19.4)		16.605**
	있음	58(32.6)	23(12.9)	53(29.8)	21(11.8)	23(12.9)	
여성의 직업	없음	10(41.7)		7(29.2)	7(29.2)		11.863*
	있음	22(36.7)	6(10.0)	23(38.3)	5(8.3)	4(6.7)	
가치관	전통적	38(38.0)	13(13.0)	27(27.0)	13(13.0)	9(9.0)	2.198
	근대적	37(33.9)	16(14.7)	34(31.2)	9(8.3)	13(11.9)	

\*p&lt;.05, \*\*p&lt;.01, \*\*\*p&lt;.001

자녀수별로 주요 출산 연기 또는 포기 요인은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고, 다음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으며, 다음이 지금 자녀로 충분하거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였다.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의 경우 모두 지금 자녀로 충분해져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 여부별로는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는 지금자녀로 충분해서가 이유였고, 다음이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계획은 있지만 출산을 연기하는 이유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밖에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다만 본인의 직업여부와 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여성이 취업한 경우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직업이 없는 경우는 경제적 곤란과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주요 요인이었고, 직업이 있는 여성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출산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으로는 <표 7>에서와 같이 보육비 지원이 33.3%로 가장 욕구가 많았고, 다음이 유급출산휴직과 보육시설확충이 각각 20.9%, 20.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출산보조금 지원은 9.3%로 나타나 현행 출산보조금 지원이 출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출산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의 핵심은 보육비 지원이나 유급출산휴직, 그리고 양육시설 확충의 세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요인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향후 정책 마련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표 7> 희망 출산 지원 방안

항 목	빈도	%
보육비지원	194	33.3
유급출산휴직	122	20.9
양육시설확충	121	20.8
교육비지원	92	15.8
출산보조금	54	9.3
합 계	583	100.0

## 5. 결론 :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에 거주하는 20-39세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로 할당 표집하여 360명이 조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결정요인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

요인이었다. 이들 세 가지 모형을 통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40.1%였다. 반면, 가치관적 요인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통합모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둘째, 향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과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 성별이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첫 자녀가 여아일수록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자녀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첫 자녀가 남아인 경우는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향후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층으로 이들은 결혼기간이 짧은 신혼기의 부부들임을 알 수 있다.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즉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 높을수록 향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금 자녀로 충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고, 다음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특히 성별, 거주지역, 자녀수, 직업여부와 여성 직업여부, 자녀희망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출산과 관련된 단편적인 인구정책으로는 실제적인 출산력 향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특성별로 출산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이유에서 차이를 나타내므로 정책의 대상을 가족내의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에 초점을 둔 가족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이영분·양심영, 1999). 이는 가족복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성정책, 아동정책, 교육정책, 노인정책, 고용정책 등의 다른 정책목표들과 통합 및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구복지정책의 개발의 필요성과도 관련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신규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급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생산인구나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생산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비가 증가할수록 사회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김승권·최병호, 2002).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규모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 가족 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사실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와 여성복지의 증진 및 체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가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층위의 안정적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되는 것으로 특히 성평등적인 가치관의 확산을 통해 인구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과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은기수, 2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가족들이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 가족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개별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저출산으로 귀결된 것이다. 따라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적 대응이 필요한데, 출산을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여기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적으로 영유아 및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보육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결혼기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데, 즉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첫 자녀는 출산하게 되므로 혼인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둘째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혼인율을 높이고, 혼인연령을 낮추는 전략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저연령 결혼가정에 유리하도록 주거안정 지원 또는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거나, 혼인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밖에 직업여부와 자녀수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업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취업 조건이나 보육 환경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취업과 출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연구원, 1999).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 양육시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중단하거나 공공연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인 모성보호제도나 보육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 등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 중인 유급육아휴직제도는 물론이고 시차출퇴근, 단력적 근무제도, 직무공유제, 재취업훈련프로그램 실시, 집-직장-탁아소-시장을 편리하게 연결시키는 공공교통수단 개발,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확대, 보육시설의 아동보호시간 연장 등의 가족친화적 정책들을 도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4b;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 2002).

넷째, 출산과 관련된 주요 욕구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의하면 출산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이유와 출산에 도움이 되는 희망 정책이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의 부담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주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출산 지원 방안으로 보육비 지원과 유급출산휴직과 보육시설확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부분은 지원 대상이 보편화 되어야 하며, 지원금액도 자녀 연령에 맞게 현실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의 상승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의 감소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데, 교육정상화가 선행되

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육시설확충과 관련한 욕구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즉 직장보육시설과 영아보육시설, 그리고 야간 보육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소규모의 사업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연계해서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영아보육시설이나 야간 보육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나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동사무소 등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급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먼저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최소 만1세까지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휴직기간 동안 현실화된 급여 지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출산 여성에게는 고용과 관련하여 가산점을 부여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한 방법이며, 무엇보다 각 사업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병행될 때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수연. 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승권·조애지.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서문희. 2001.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최병호. 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민자.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제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환. 1998.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김한근. 1993. 『한국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박선숙. 2005. “Global Standard에서 본 한국의 출산복지와 출산위기”.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23-444.
- 박수연. 1996. “한국 출산력저하의 사회인구학적 영향 고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변준한. 2003. “기혼 유배우 여성의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미간행).
- 보건복지부. 2004a. 『우리나라의 걱정인구 산출관련 추진계획』.
- \_\_\_\_\_. 2004b.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 서문희. 2003.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보육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76: 87-97.
- 신영수. 2003. “자녀출산의 경제적 결정요인과 외부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9: 73-84.
- 은기수. 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5.
- 이병렬. 2003.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국회도서관보』 12: 63-79.

- 이삼식·조남훈. 2000.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분·양심영. 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3(1): 117-148.
- 이화영. 1980.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다변량회귀분석법에 의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홍택. 1994. 『인구학-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조남훈·김승권.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혜정. 1988. “자녀수 결정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한자녀 및 두 자녀 이상을 원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장지연. 1997.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한국인구학회지』 20(2): 5-42.
- 장창곡·김응석. 1988.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수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6: 73-83.
-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광희·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저. 2002. 『한국의 인구』. 통계청.
- 통계청. 2004.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Balakrishnan, T., G. Ebanks, and C. Grindstaff. 1980. "A multivariate analysis of 1971 Canadian census fertility data."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7: 81-98.
- Binkin N. J., R. Yip, L. Fleshood, and F. L. Trowbridge. 1988. "Birth Weight and Childhood Growth." *Pediatrics* 82(6): 828-834.
- Brewster, K., and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271-296.
- Choe, Minja Kim. 1998. *Consequences of Fertility Decline in The Republic of Korea: Policy Implication*. East-West Center, United States of America.
- Ewer, P. A., and E. Crimmins-Gardne. 1978. "Income in the income and fertility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 54-63.
- Davis, N. J. 1982. "Childless and single- childed women in early twentieth- century America." *Journal of Family issues* 3: 431-458.
- Freedman, R. 1975.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p. 13-21.
- Frejka, T., and G. Calot. 2001. "The Postponement of births in low fertility countries: An Overview."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uldin.
- Gauthier, A. H. 1996. *The State of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the Industrialized Counties*. Oxford: Clarendon Press.
- Kim, M., R. Retherford, and S. Kim. 2004. "Very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Patterns and Prospects." *The 2004 Annual Meeting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Boston Massachusetts.

- Kohler H. P. 2001. "Parity Progression Ratios with Continued Fertility Postponement: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Delayed Childbearing for Fertility in Sweden, the Netherlands and Spai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uldin.
- Kramer M. S. 1987. *Determinants of Low Birth Weight: Methodological Assessment and Meta-analysis*. Bullentin of WHO, 65(5).
- MaDonald, P. 2001. "Theory pertaining to low fertility."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uldin.
- Mauldin, W. P., and Berelson. 1978.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iuntries, 1965-75." *Sudies in Family Planning* 9: 89-147.
- Toulemon, L. 2001. "Why fertility is not so low in Franc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rch.
- Wilson, C. 2001. "Implication of global demographic convergence for fertility theory." *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Social Welfare

Lee, In-Sook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o influence low fertility in three aspects: demographic fea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sense of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of marriage in demographic feature,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 necessity of children in personal sense of value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current fertility level, (2) period of marriage, total numbers of children, gender of the first child are determining the future childbirth in demographic feature.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in socio-economic status. Thirdly, in the aspect of personal values, how much one needs to get married, how much one prefers son to daughter, how much one relies on one's children to realize one's dream are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3) the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s well as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lacking of a day nursery, and economic difficulty are causes to make people to postpone or give up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to promot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family welfare as well as social welfare is necessary. These also implicate that if we pursue integrated policies on women, childcare, and education,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population welfare policy.

Key words : fertility, low-fertility, implication of social welfare, population welfare policy.

[접수일 2005. 6. 2. 게재확정일 2005. 7. 28.]